

# 이낙연 수난 시대...사면·이익공유제에 지지율마저 흔들

이재명 25.5%·윤석열 23.8%·이낙연 14.1%

## 이낙연, 민주·진보층 밀리고 호남도 위태
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부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.

'국민통합'을 화두로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가 도리어 국민 다수로부터 반발을 산 데다가,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진보·보수 양측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. 차기 대선주자 3위로 밀려났다는 여론조사마저 발표되며 우울한 새해를 맞이한 모양새다.

13일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(9~11일,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,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)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5.5%, 윤석열 검찰총장은 23.8%로 오차범위 내 선두권을 달렸다. 이낙연 대표는 14.1%에 머물렀다.

한길리서치 조사는 여야 후보 6인을 제시하고 이 중 지지 후보를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.

지난해 12월 2주차 실시 조사에 비교해보면 이 지사는 4.2%포인트 상승한 반면, 윤 총장은 4.4%포인트, 이 대표는 3.9%포인트 떨어졌다.

지난해말 윤석열 총장이 범야권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이낙연·이재명 두 여론 후보와 3자구도가 이어졌지만, 새해 첫 머리에 이 대표가 3강에서 뒤처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다.

이는 이 대표가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꺼낸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의 역풍으로 풀이된다. 수감 중인 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것이 도리어 친문·진보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온 셈이다.

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 45.3%, 이낙연 대표 32%로 격차가 벌어졌다. 진보층에선 이 지사 42.9%, 이

대표 20.4%로 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.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균열이 나타났다. 이 대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지사에 밀린 가운데 호남에서 29.7%를 얻으며 유일하게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, 그나마도 25.3%인 이 지사와 오차범위(표본 오차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) 내에서 경합했다.

이같은 이탈은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. 민주당 광주 지역 의원 대부분은 지난 4일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후 사면론에 대한 견해를 묻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.

나아가 광주 광산구율이 지역구인 민형배 의원은 "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현실적 효용성, 정치적 의미, 당과 대권주자로서 갖고 있는 무게감 등을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본다"고 이 대표를 정면 비판한 뒤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.

이 대표가 새해에 던진 또다른 이슈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는 진보·보수야당 가릴 것 없이 혹평이 쏟아졌다.

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은 '반(反)시장적 기업 팔 비틀기'라고 비난했다.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'증세 없는 복지'에 빗대며 "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. (증세라는)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하는 것"이라고 꼬집었다.

정의당도 '자발적 참여'를 내건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. '특별재난연대세' 관련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"이 대표, 지금 어딜 보고 있는가"라며 "지금은 기업의 선의 뒤에 숨는 후원자를 자처할 때가 아니라 재난 시기 사회연대를 이끌어 낼 책임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"라고 힐난했다.

민주당 내부도 반응이 엇갈린다. '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(TF)'를 설치하고 지원사격에 나섰다. 허무만에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"취지는 공감하나 '자발적 참여'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. 압박 또는 관계기부의 위험도 있고,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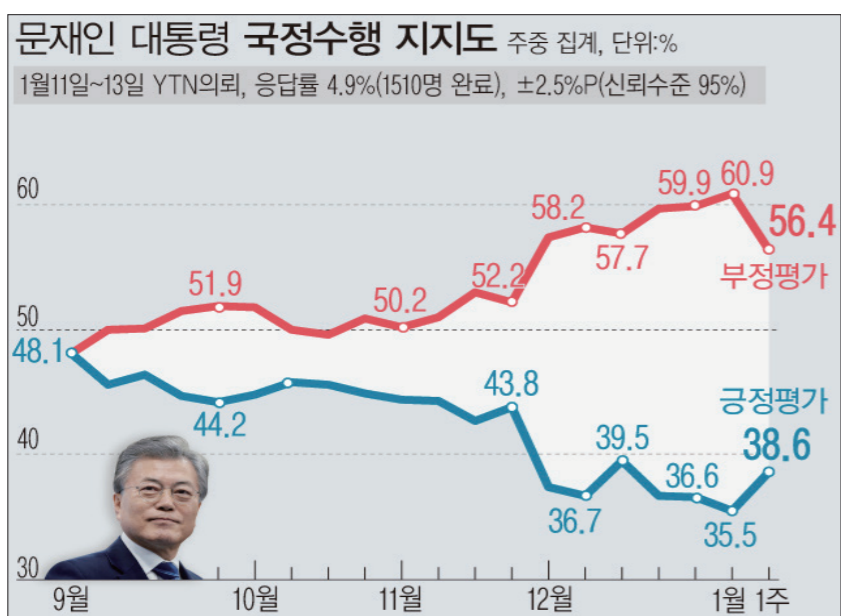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자료를 살피고 있다. (공동취재사진)

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"고 공개 비판했다.

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"이 대표 지지율은 문 대통령, 민주당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. 때문에 당대표가 된 후 친문에 가까운 행보를 했지만 지지율은 도

리어 떨어졌다"며 "이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면론, 이익공유제 등의 얘기를 꺼냈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제대로 될 하기도 전에 수그러들었다. 자꾸 우왕좌왕하니 지지율이 오를 수 없는 것"이라고 지적했다.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

## 문대통령 지지율 3.1%p 오른 38.6%...4주 만에 상승 반전



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. 최근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이슈가 진보층과 중도층의 움직임을 견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 60%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부정평가는 50%대 중반으로 하락했다.

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~13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.1%포인트 오른 38.6%(매우 잘함 20.5%, 잘하는 편 18.1%)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. 긍정평가는 12월 4주차(36.7%)→5

주차(36.6%)→1월 1주차(35.5%) 등 3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며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다.

'잘못하고 있다'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.5%포인트 내린 56.4%(잘못하는 편 13.2%, 매우 잘못함 43.2%)였다. 부정평가는 12월 4주차(59.7%)→5주차(59.9%)→1월 1주차(60.9%)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.

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.8%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 있었지만, 지난 조사(긍정 35.5%·부정 60.9%, 25.4%p) 대비 격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. '모름·무응답'은 1.4%포인트 증가한 5%를 보였다.

리얼미터 측은 "진보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이 움직이면서 양 진영의 쌍끌이로 강한 반등이 나왔다"고 분석했다. 지난해 12월 부동산 정책 불신, 법검 갈등 등 민심 이반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전격적인 '인적 쇄신' 카드를 꺼냈지만, 그 효과는 미미했다.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다.

그러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회복·포용·도약을 골자로 한 집권 5년차 국정 비전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.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.

대통령 지지율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8일 36%(부정평가 60.5%)로 마감한 후, 11일에는 36.6%(0.6%p↑, 부정평가 58.8%), 12일에는 37.5%(0.9%p↑, 부정평가 57.1%), 6일에는 39.6%(2.1%p↑, 부정평가 55.8%)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.

지역별로 대전·세종·충청(15.4%p↑, 33.1%→48.5%, 부정평가 48.4%), 인천·경기(6.8%p↑, 35.8%→42.6%, 부정평가 52.3%)에서 상승한 반면, 대구·경북(2.6%p↓, 20.7%→18.1%, 부정평가 75.4%), 부산·울산·경남(2.5%p↓, 32.7%→30.2%, 부정평가 63.8%), 서울(2.4%p↓, 34.6%→32.2%, 부정평가 63.4%)에서는 하락했다.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(80%)와 유선전화(20%)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. 뉴시스

## 이재명 "여러분은 20~30만원 받았다고 막 쓰러다니겠다"

### "보편 지원하면 돈 쓰러 몰려다닌다? 국민 폄하"

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추진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과 관련, "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~30만원 지급했다고 방역지침 어겨가며 막 쓰러 가고 그러겠는가"라고 반박했다.

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"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"고 했다.

앞서 경기도의회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여 설 연휴 전 지급이 유력시되자,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회의에서 "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"고 비판한 바 있다.

이와 관련, 이 지사는 "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단계 올려야 하는 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"라며 "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거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 등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"라고 반문했다.

그는 "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울 것"이라며 "본인은 그럴 건가. 방역지침을 어기면서 돈 쓰러 막 다닐 것인가"라고 힐난했다.

이 지사는 또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"위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"라며 "효율성 여부 보다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선의로 한 거 아니겠나"라고 말했다.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

### 호남신문 광고안내

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.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.

기사제보 (062) 222-2580	광고문의 (062) 228-2580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축하·근조화환 전문점

### 전국 꽃배달 서비스

# 60,000

### 농장직영 광주꽃도매

직통전화 010-2400-7774  
주문팩스 062-946-0053